한국노총 "올해 사회적대화-대정부 투쟁 함께 간다"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서 사업계획 의결
"경사노위서 정부 들러리 되는 일 없을 것"
노란봉투법 및 5인 미만 근기법 추진키로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에 전격 복귀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투쟁과 협상을 동시에 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오후 경기 마사회 렛츠런파크에서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도 사업보고 및 회계 감사결과와 결산보고를 승인했다.

우선 한국노총은 올해 운동방향으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내세웠다. 기후·인구·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시대에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정년연장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악 저지 ▲임금 불평등 구조 개선 ▲산업안전보건 예방 및 보상 강화 등 10대 정책과제와 ▲플랫폼·특고(특수고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공무원·교사노조 30만 조직화 등 조직확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의 대국회·대정부 협상력 증대와 정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 정책 기조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정부의 들러리로 사진 찍는 한국노총의 모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시작됐지만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 투쟁이든 사회적 대화든 응축된 현장의 힘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며 "작은 입장의 차이를 앞세우기보다, 한국노총이 주도하는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현장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입법 시도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자은 "이미 시행 중인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시도와 주 69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악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싸워나가겠다"며 "특히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개악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복합위기의 시대에 맞게 '전국민 고용보험' 등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초 불거진 내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리성·민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직혁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한국노총 조직혁신안'에 따라 노조 간부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성폭력 범죄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피선거권 특별 사유 인정조항을 규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선거인의 선거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 투표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비리 연루 대표자와 조합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회가 관련자 회의 참가를 제한하고 진상조사와 징계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 조직의 통합 및 강화를 위해 회원조합 신규가입 기준을 기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상향하고, 유지 조건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강화한다.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 임원선거도 중앙의 임원선거 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흔들리고 쓰러지고 깃발이 꺾이는 순간에도 다시 조직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지키는 대의원 동지들과 조합원들의 힘이었다"며 "복합위기 시대를 개척하는 2024년 한 해를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도 "노동정책 개악에 맞서 안으로는 단결과 연대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산하 조직들의 조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밖으로는 협상과 투쟁을 통해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라며, "중앙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사업장에서의 교섭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생존권 사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장시간 노동 근절 및 노동시간 단축, 실질임금 인상을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선옥 기자

독립운동가 모습 담긴 연 제105주년 3·1절을 이틀 앞둔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화성 창룡문에서 한국연연맹 회원들이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담긴 연을 날리고 있다.

여순사건 유족 "진상보고기획단에 극우 인사…재구성해야"

"공정·진실·정의에 기반한 기획단 구성해야"
"뉴라이트 학술대회·홍범도 흉상 철거 주도"

여수·순천 10·19사건 유족들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맡은 기획단 내부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재구성을 촉구했다.

여순항쟁서울유족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개정안(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신과 시행령에 걸맞은 학식과 경륜 등을 갖추고 공정과 진실·정의에 기반한 단원들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지난해 말 구성된 기획단 단원 15명 중 당연직 5명과 유족대표 1명을 제외한 위촉직 단원 9명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역사 왜곡에 앞장선 극우 인사라고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학계 단원으로 위촉된 허만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사회과학처장은 2011년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나 처장은 최근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육사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기도 했다는 게 유족의 지적이다.

이자훈(83)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은 "기획단원 상당수가 뉴라이트로 인사로 구성됐다. 허만호 교수와 나종남 처장이 대표적"이라며 "지난 22일 기획단 회의에서는 '14연대의 봉기는 반란이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반란군과 이에 찬동하는 민간인들이 합동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기에 진상보고서는 반란이라는 원칙 속에서 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 총에 의해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뒷산에서, 개울에서, 구렁텅이에서 언덕배기에서 집단학살 당했다"며 "유족들은 정식 재판 없이 즉결 처형된 억울한 부모 형제들이 한을 풀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회는 "2021년 6월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고 2년6개월이 넘은 지금, 7465명 신청자 중 진상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7.6%인 566명에 불과하다. 오는 10월5일이면 진상조사가 끝나는데 통탄스러운 현실"이라며 기획단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0월 조사 만료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 2년 만인 지난해 말 기획단을 구성해 발표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단계였던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과 전북·경상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이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소방청, 사계절 중 '봄철 화재' 가장 많다

5년간 봄철 화재 5만4820건 발생…전체 28%

1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계절은 봄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봄철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년~2023년) 봄철에 발생한 화재는 총 5만4820건으로 전체 화재의 28.3%를 차지했다. 겨울철 화재는 28.1%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가을철 21.9%, 여름철 21.7%로 나타났다.

봄철은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 강한 바람 등 계절적 요인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은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56.5%(3만972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전기적 요인이 19.6%(1만741건)로 뒤를 이었다.

봄철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연평균 660명으로, 겨울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연평균 91명이 숨지고 56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재산피해는 1조7000억원으로 전체 재산피해액 중 36.2%가 봄철 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이는 가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보다 약 2배 큰 수준이다.

소방청은 봄철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 공사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글램핑장·캠핑장 등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건설현장 및 공사장에는 용접 작업을 할 때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서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할 계획이다. SNS를 활용해 안전 정보도 적극 공유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발생 원인 중 부주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권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전담기관 운영

동부권 2곳·서부권 3곳·중부권 1곳

전남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정서안정과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정 기관은 ▲여수전남병원정신건강의학과 ▲광양허윤정신건강의학과 ▲목포중앙병원정신건강의학과 ▲해남우리종합병원정신건강의학과 ▲영암한국병원정신건강의학과 ▲나주든든정신건강의학과 등 동부권 2곳, 서부권 3곳, 중부권 1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전담기관은 오는 3월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 동안 지역 위(Wee)센터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상담·치유 지원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 위(Wee)센터 업무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맞춤형 운영비를 배정해 각 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과 무안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기관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와 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의 내실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